

전북도, 상용차 생산거점 재도약 발판 마련

송하진 도지사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으로 대전환 · 산업 지능화 · 친환경화 · 경량화 위한 혁신 이뤄질 것”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도내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전북도가 국내 상용차의 생산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약속돼 산업단지의 혁신은 물론, 현재 내연기관 중심에서 탈피해 변화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미래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국내 상용차의 생산거점으로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 생산을 전북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차시장은 연평균 7%의 성장률로 승용차를 능가하는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산업 대개조 사업으로 전북 자동차산업의 제2도약을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주요 내용

전북도 산업 대개조 사업의 비전은 산업단지 혁신으로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군산 국가산단이 거점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단이 연계 산업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 39개 사업 4,945억원 규모의 개별사업이 추진,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30% 전환하고, 수출비중을 10% 높이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매출액 1조6,000억원, 수출액 1,000억원 증대와 일자리 1만명 창출, 110개사 산업구조 개편, 160건 기술혁신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도와 관련 시·군은 물론,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계획 추진단’이 꾸려져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장점

이번에 선정된 4개 대상 산업은 지역기여도, 산학연 집적도, 통합발전 상호연계성이 장점으로 고려돼 선정됐다.

4개의 대상 산업은 전북도 전체 산업단 88개중 입주업체수 35%, 생산액 28%, 고용인원 29%를 차지하는 중심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전자, 소재, 뿌리산업 등의 업종이 주로 입주하고 있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 측면에서 특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들이다.

특히, 군산국가산단은 타타대우차, 명신, 세아베스틸 등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 및 완성차 생산 핵심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도내에서 산업기여도 및 기업집적도가 가장 높고, 자동차 관련 혁신기관, 대학 및 정부정책이 집중돼 있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생산의 기반을 갖춘 산업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향후 추진 사업

도는 이번 대개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혁신과 인력양성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 등 3개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위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2022~2024/120억원), ‘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2022~2024/8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일터혁신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2022~2024/227억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2022~2024/45억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사업’(2022~2024/300억원) 등을 추진하며 사람중심 일터를 조성하고 수요중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2022~2024/445억원)과 ‘노후산업 개발사업’(2022~2024/588억원)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을 위한 노력

도는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등과 TF팀을 구성

해 사업추진 논의를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에 필요한 당위성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전북의 산업단지 혁신 필요성과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향 파악 후, 문제 발생시마다 작기에 대응한 전략이 선정에 주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지침 발표 후에는 해당 3개 차지단체 시장·군수는 물론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캠퍼스융합기술원 등 혁신기관들도 협력에 나선 것이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으로 그동안 오래되고 낡았던 지역의 산업이 지역의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환골탈태할 것으로 대전환과 산업의 지능화·친환경화·경량화를 위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이번 대개조 사업은 지난 2월 선정된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어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추진되는 두 번째 대규모 사업이다”며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그린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혁신, 도약을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협약,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전북삼라포컬마케팅 세미나실에서 24일 개최했다.

농촌협약 선도 위한 정책세미나

전북도, 주체별 역할·책임 점검·향후과제 협의

전북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협약,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전북삼라포컬마케팅 세미나실에서 24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임실군, 순창군 관계자와 도 담당자, 농어촌공사전북본부 담당자, 관계 전문가, 컨설턴트, 14개 시·군 마을만들기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2021년 10대 농정이슈 중 첫 번째로, 새로운 농촌정책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 자원 조사·분석, 주민여론청취, 공무원 전담조직 설치, 거버넌스 운영체계 수립 등 지역맞춤형 농촌생활권 발전 방안을 담은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과 ‘365생활권활성화계획(5년)’을 수립, 공모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과 지방비를 집행하게 된다.

현재, 전북도는 전국 12개 시·예비사업 중 임실군(2021년~)과 순창군

(2021년~) 2개 군이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됐고, 대다수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 협약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그간 농촌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 운영, 일반농산어촌사업 등을 선도해 온 전북도가 보다 효과적인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도·시군 행정, 농어촌공사, 중간지원조직, 관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가장 모범적인 농촌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폭넓게 협의했다.

황만길 군장대 교수의 진행으로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개발센터장 ‘농촌협약 목적과 거버넌스 운영’, ▲이희창 순창군 담당공무원 ‘순창군 농촌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장현우 임실마을기꾸기협의회 사무국장 ‘임실군 농촌협약 추진현황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이원석 참좋은마을연구소 대표 ‘민관협치에 의한 계획수립 중요성’, ▲최성재 농촌디자인(주) 대표 ‘공학적·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농촌협약 전문가 양성’, ▲문영준 센터 생생마을부장 ‘농촌협약과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등 총 6명의 주제발표와 참석자 자유토론이 180분간 이어졌다.

/유호상 기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전북도가 전북도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25일부터 도내아파트 1,49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체 제작한 포스터 1,800부와 지난해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UCC를 송출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인식개선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따뜻한 인사’, ‘휴게시간 존중’,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 등 4가지 사항을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명시하며,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입주주민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등 모두가 인권 보호와 지급이의 대상임을 알렸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하세요”

4월 1일~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전북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조건 확

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을 거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관리반을 운영해 신청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사업 주요내용, 농업인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는 신청서와 동봉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말까지 배포될 계획이며,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소득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